

“식비대납 의혹 추가 재감찰 요구 부적절”

민주 이원택 도지사 후보 “이미 당 차원 고강도 감찰 완료... 모든 수단 동원해 규명될”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공천 후보로 확정된 이원택 후보가 28일 ‘식비대납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재감찰 요구와 정치권 공방에 대해 “당 차원의 감찰이 이미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진행됐고, 재감찰까지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감찰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산되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문제 제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리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도민들에게 혼란과 오해를 줄 수 있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핵심인 ‘식비대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일부 참석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의혹이 확대되고 있지만 참석자 간 진술이 상반되는 부분도 존재

한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모임은 특정 정치적 지지를 목적으로 한 자리가 아니라 정책 간담회 성격이었으며, 본인이 이를 주도하거나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비대납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일정 상 중간에 자리를 이석했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다른 정치인 관련 사건과의 비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서로 다른 사안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신과 관련된 사안

은 실제적 증거 없이 제기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율러 “현재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규명”이라며 “수사기관이 삼자대질, CCTV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 또한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끝으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필요 시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만호 기자

“민주 도지사 경선 과정 진상 규명해야”

장기철 전 정읍지역위원장, 재경선 촉구 “도지사 후보자 결정됐으나 후폭풍 거세”

더불어민주당 전 정읍지역위원장인 장기철 씨가 28일 오전 국회 소공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장 씨는 이번 사태로 청년 당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을 지키며 활동하던 청년 당원 40여 명이 감찰과 수사기관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부분 자영업

자인 이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다. 여론들의 정치적 욕심에 청년들만 희생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 씨는 논란이 된 정읍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 모임 성격의 자리였고 20여명의 청년 당원이 참석해 이원택 후보의 발언을 들었다”며 “자신은 잠시 둘러 건배만 하고 나왔다. 이후 식사비 결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당이 긴급 감찰을 두 차례 진행했음에도 현장에 있었던 자신에게는 단 한 차례의 확인도 없었다”며 “가장 객관적인 증인이 가능한 사람을 배제한 채 ‘절표 감찰’로 마무리했다”고 비판했다.

장 씨는 이번 경선 과정 전반을 두고 “전북은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중앙당의 오만함과 지역 정치 구조의 문제, 일부 세력의 결합이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전북도지사 경선 무효화 △동일 기준 적용을 통한 재조사 △재경선 실시 등을 요구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전북 도지사 후보는 전북도민에게 맡겨야 한다. 동화농민혁명의 후예인 전북도민의 민주적 판단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전북 경선은 흥행에도 실패했고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졌다”며 “악랄한 후보가 많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이 된다. 무너진 전북 민주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재경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만호 기자

도의회, 시군의회 의원정수

선거구 조례안 원안 가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8일 제42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조정된 도의원 선거구와 한법제관소 관할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 등을 반영하여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같은 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확정된 선거구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차기 지방선거 준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1만호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진보당·정의당 등 진보정당 후보자들이 2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지후보 정책협약식 및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존중 전북 실현·정치세력화 강화”

민주노총 전북본부, 진보당 등 진보정당 후보들과 정책 협약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이민경)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정당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지지에 나섰다.

노동존중 지방정부 실현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강화를 목표로 한 조직적 결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지후보 정책협약식 및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산별대표자들과 비롯해 진보당과 정의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들이 대거 참석해 공동의 입장을 발표했다.

행사는 박상준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돼 취지 설명과 참가자 소개가 이어졌고 박상이 민주일반연맹 전북본부장이 지지 발언에 나섰다.

이후 진보당과 정의당 후보들의 발언, 박인수 수석부본부장의 경과보고 및 지지선언, 정책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정책협약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공성 강화,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 정의를 위한 전환 실현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산재·임금체불·노동현오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권한 지방이양 추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직접 지원 △노동정책 전달보좌관 도입 및 노동행정 체계 강화 △양대노총과 지방정부 간 노정협의체 구성 및 정례 협의 보장 △전북형 노동자종합복지관 설립 등 5대 핵심 요구를 명문화했다.

또한 별도로 마련된 5대 영역 25대 정책과제를 협약 이행의 기준으로 삼고, 당선 이후에도 정례적인 정책협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행정과 예산 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지선언문에서 “이번 결정은 특정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를 넘어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며 “전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불안정 고용,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소규모 사업장 차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이 산재 민안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과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조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의 삶과 일터가 지역에 있는 만큼 지방정부 역시 노동문제 해결의 책임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지 대상에는 진보당 백승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강성희 전주시장 후보, 오은미 순창군수 후보를 비롯해 고미영 전북도의원 후보, 김금주·여민영·오승희·최한별 전주시의원 후보, 손진영 익산시의원 후보, 황지영 남원시의원 후보 등이 포함됐다.

정의당에서는 강은희 전북도의원 후보와 오현숙·한승우 전주시의원 후보 등이 지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지후보들이 당선 이후에도 정책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노동자의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

“4대 의혹 해명하라” vs “절차 따라치러”

순창군수 선거 ‘공방전’

진보당 오은미 후보 “각종 불공정 의혹에 휩싸여” 민주 최영일 후보 측, 오 후보가 제기한 의혹 해명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오은미 후보(사진)가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영일 순창군수에 대해 4대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며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자치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과 청렴”이라며 “단체장이 모범을 보여야 행정이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순창군정이 각종 불공정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오 후보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친동생의 공유재산 불법 사용 목인 의혹이다. 오 후보는 “하천부지에 최 군수 친동생이 조경수를 무단 식재한 사실이 있고, 이는 공유재산의 사적 사용을 금지한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및 변상 조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2022년 정치자금 펀드 상환 문제다. 오 후보는 “약 1억2,000만 원 규모의 정치자금 펀드가 조성됐지만, 약속된 기한 내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입금 내역과 원금·이자 상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는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의혹이다. 오 후보는 “최 군수 배우자가 2024년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약 1억8,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재산 증가 규모 역시 통상적인 급여 수준으로 보는 설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넷째는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이다. 그는 “공식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 외 시간에도 관용차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운행 기록 공개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영일 군수 측은 각 사안에 대해 해명 입장을 내놨다. 친동생의 조경수 식재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치자금 펀드와 관련하여 “일부 입금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해서 반한 절차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군수의 아파트 구입 자금 등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철저히 관리감독 확인을 하고 있으며 시스템상으로 관리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관용차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최영일 군수가 당원직 장애인 체육회장으로 체육회 소속 차량이 군수 재산으로 되어 있어 사적 차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1만호 기자

“소년법, 처벌 넘어 권리·회복 중심으로”

민주 이성윤 의원, 법 개정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소년범죄 예방과 보호소년의 사회 복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계기로 소년사법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처벌 중심에서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성윤 의원을 비롯해 박근혜·백성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오영관 상임위원, 노수환 한국형사법회화장 관계부처 공무원과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오영관 상임위원은 “소년범죄는 사회의 거울”이라며 처벌 확대보다 소년 사법체계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소피 킬라제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사회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을 주문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원혜숙 인하대 교수는 소년법 개정의 원칙으로 복지적 개입 강화와 소년전문법원 도입 등을 제안했으며, 소라미 변호사는 스코틀랜드 사례를 소개하며 보호 중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년의 권리 보장과 피해자 회복, 교육·복지 중심 접근 등 다양한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또한 경찰·검찰·법원 관계자들은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1만호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예비후보, “시민의회 설립 완성할 것”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남원시 시민의회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이숙자 후보는 “회의와 협박에도 꺾이지 않은 뜻과 의로, 시민의회 설립을 완성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 시민후보 출마의 배경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시민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정직한 정치와 투명한 행정을 보여드리는 것이 남원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선 후 4년간 시민의 열

세를 단 한 방울의 피와 같이 여기는 약속으로 7대 실용주의 실천 공약으로 △남원형 안전 인센티브 도입 △쓰레기 종량제 봉투 맞춤형 무상 지원 △스마트 분리수거함(AI 무인회수기) 도입 △찾아가는 생일상 배달 서비스 △전동리보드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2인 탑승 방지 센서 등) △지능형 교통 체계(ITS) 고도화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숙자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의를 지지하기도 부족한 때에, 정청래 당대표는 당의 분열의 씨앗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